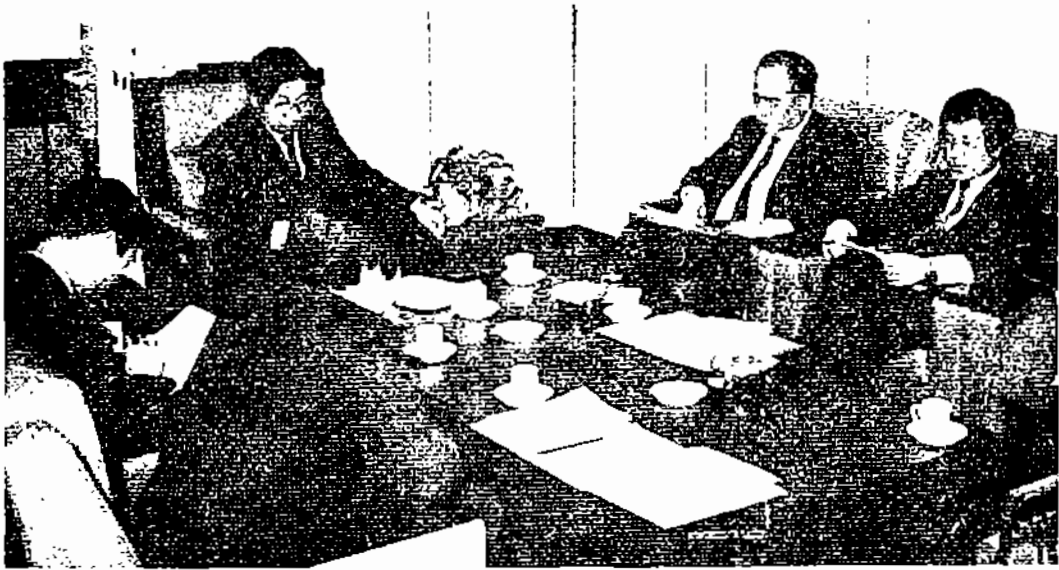


## 大學財政, 이대로 둘 것인가



사 회 : 裴 鍾 根 (東國大 教育學科)  
 참 석 : 白 勝 基 (聯國大 學長)  
           金 熙 執 (高麗大 經營大 學長)  
           宋 梓 (延世大 企劃室長)  
           尹 正 一 (서울大 教育學科)  
 원고경리 : 鄭 上 淑 (本 協會會 教育資料部)  
 일 시 : 1986년 4월 4일  
 장 소 : 본 회의회 회의실

### 大學教育의 質을 결정하 는 대학재정

시 會 : 大學은 우리 사회에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가치관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의 하나라고 믿니  
 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막  
 대한 資源의 投入이 필요하게  
 마련인데 우리의 대학은 전반  
 적으로 財源의 不足을 심각하  
 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  
 라서 부족한 資源을 어떻게 충

당하고 또한 가장 유효적절한 곳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대학의 當面課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財政이 실제로 大學教育의 質을 결정한다고 본다면 大學財政의 活性化는 곧 대학교육의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학재정에 관한 自由로운 對談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학재정의 教育的 役割과 機能 그리고 目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勝基: 저는 기본적으로 教育은 공익을 위한 국가 기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美國의 아이오와주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해 정부에서 그 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公經濟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私學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당국이 감시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私學도 특정 개인이나 제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公的인 目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학에 대해 좀더 積極的인 支援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서도 이런 좌담회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대학재정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하겠지요.

### 대학재정의 社會的 役割도 중요

尹正一: 대학교육의 활동 범위

와 질을 결정하는 支援體制로서의 대학재정은 교육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納入金政策의 社會的 役割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所得再分配의 역할입니다. 비록 대학재정에 있어 납입금은 그 일부만이긴 하지만, 등록금을 일대로 인상하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로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物價統制의 기능입니다. 私立大學의 등록금 自律化 要求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납입금의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家計 압박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넷째는 대학재정이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壓力要因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갖고 있는 카이는 하나인데 대학에 많은 부분을 쪼개어 주면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이 위축된다는 것으로, 전체 시스템 속에서 학교 급별로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經濟成長에 대한 寄與를 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質 좋은 大學教育을 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면에서 초·중등교육의 투자수익률보다 大學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연



“사학의 재정문제는 단지 교육의 質의 良·不良을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存廢를 의미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김희준 학장)

구 결과에 의하던 대학의 投資回收率이 약 13%로 경제성장에 대한 寄與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金熙執: 저는 실무적으로 대학재정에 관계하다 보니까, 大學의 發展에는 반드시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人的 측면에서 教授의 質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物的 측면, 즉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非營利的 教育기관이고, 재정은 教育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마치 美國에서 사립대학들이 경영 곤란으로 인해 대학을 州政府에 헌납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도 단지 교육의 質의 良, 不良을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存廢를 의미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



“국립대학의 면세혜택과는 달리, 사립대학에 기부하면 法定限度額 범위 안에서만 경비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불균형한 稅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송자 교수)

다고 합니다. 大學財政은 특히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아주 기본적인고도 긴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尹正一: '70년대 초반에 長期教育計劃審議會가 장기교육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死藏되었던 것은 바로 경제기치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平準化政策은 목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財政的 側面이 나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존재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때 대학의 질 개선을 위해 大學教育改革을 추진한 때가 있었지만 역시 이것도 財源이란 측면을 소홀히 하고 계획만을 제시했기에, 그 자체는 아주 좋은 設計이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

했습니다. 반면에 '80년 7·30 教育改革措置가 많은 論難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개혁 조치권 뒷받침할 수 있는 教育稅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教育活動과 財政은 서로간에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寄附金을 가로막는 세제 불균형

司 會: 여러 교수님들께서 대학재정의 목적과 역할을 現實的인 次元에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재정에 있어서 收入의 構成에 대해 宋梓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宋 梓: 필요한 재원을 더 잘 調達할 수 있는 여건이 造成될 수 있는데도, 그것이 당국의 정책적 이유 등의 大學外的인 문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寄附金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資本主義 國家의 사립대학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매우 教育熱이 높은 같은 자본주의 국가인 大韓民國의 私立大學에서는 기부금 입학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尹正一: 大學財政에 있어서 收入은 크게 납입금, 학교법인전

출금, 국고지원금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78년의 자료이긴 하지만 美國 하바드대학의 경우는 수업료가 29%, 기부금 35%, 정부지원 26%, 기타 10%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바드대학의 '83, '84년의 기부금은 한 학년도에 1억 2천 5백만 불이었고, 스탠포드대학은 1억 1천 2백만 불, 위스콘신대학은 5천 2백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美國에 갔을 때에 콜럼비아대학과 UCLA의 총장을 만나 寄附金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確保(fund-raising)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등창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열어 기부금을 거두어들인데 總長은 등창회를 관용하여 기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主任務이고, 내부적인 일은 부총장에게 다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英國 맨체스터대학의 경우를 보면, 수입료 7.3%, 기부금 10.5%, 정부 지원 75%, 기타 7.2%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外國의 資料와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학생납입금의 비율이 너무나 높고, 기부금은 거의 없으며, 정부 지원도 사립대의 경우는 거의 없는 상례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大學財源은 國·公立대학은 국고보조와 학생납입금, 私立대학은 법인부담금과 학생납입금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宋 梓: 우리나라 대학의 寄附金이 1%도 안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가들에게도 문제

가 있겠지만, 국립대학에 기부하면 기업 경비로 인정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고, 사립대학에 기부하면 法定限度額 범위 안에서만 경비로 인정하여 면세가 안 되는 불균형한 稅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바드大學은 3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했는데 무난히 확보할 수 있었고, 日本의 慶應大學의 경우에는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5억 엔을 거두어들이려는 計劃이 超過達成되어 148억 엔이 모아졌습니다. 延世大學은 100주년이 되어 100억 원은 거두어들이려 했는데 그 절반밖에 못 거두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연세대가 돈을 거두어들이는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免稅惠澤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로 이 점이 기업가들의 寄附 動機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國立大學은 국민의 세금으로 運營하면서 기부금을 받게 된 때는 세금까지 면제해 주고, 私立大學은 명목상에 있는 기성회비조차 잘못 거두던 잡부금으로 규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불균형은 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教育투자과 企業투자는 차원이 달라

司 會 : 혹자는 우리의 기업이 사학에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自己資本의 비율이 적고 負債가 많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熙執 :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는 나름대로의 緣故關係—예를 들어 동창회, 졸업생 중 성공한 자, 특별히 교육사업에 뜻은 둔 독지가—가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에 기부행위를 할 때 損費認定을 해준다면 사학의 기부금 사정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돈을 준 경우 이익이 많아져 준다는 차원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白勝基 : 두 분 교수님의 말씀처럼 稅制惠澤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美國의 주립대학에서 제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곳의 總長은 寄附金の 確保가 제 1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韓國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登錄金依存率이 66% 정도이고, 사립대는 80~90%라고 합니다. 작년엔 聯國大學의 기부금은 4%였는데 세제대책 없이 기부금을 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대학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尹正一 : 사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나 國家發展에 기여하는 것은 똑같은데 설립자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연건가 기부금의 損費認定限度 撤廢에 대해 기획원 및 재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의 철폐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첫째는 손미처리 한도액에 기부금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들

째는 학교를 운영하는 기업체 A와 그렇지 않은 동일 업종의 기업체 B가 있을 때, 탈세의 개연성 면에서 A에게 득혜를 주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공개 경쟁·자유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제는 건전한 사학이 아닌 영세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자기 재산이란 생각에 의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업이 기부금을 많이 하고 싶어 도 여타 교육기관의 압력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金熙執 : 기부금을 포함한 교육제정의 여러 문제를 기본적으로 大學教育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다른 기업체와 관련지어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教育投資는 企業投資와는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宋 梓 : 美國 대학의 경우는 정부가 研究費를 줄 때 그대로 교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間接費를 매내어 대학운영에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거꾸로 대학에서 돈을 들여 政府의 연구비를 교수와 매칭(matching)시켜 주고 있습니다. MIT 같은 공과대학은 연구비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간접비가 학교 예산의 40%씩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文敎部나 產學協同財團에서도 대학이 간접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尹正一 : 우리나라 대학의 재원은 收益用基本財産이 너무 적어서, 53%만이 교수익성이고 나머지는 저수익성이거나 비수익성 재산입니다. 제가 1년 전에



“문교부 지침도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는 지양하고 대학의 실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백승기 학장)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不實私學에 대해 적극 가서 실상을 조사하고, 또 잘 되는 사학에 가서 比較調査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잘 되어 가는 사학과 지방의 사학들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한 지방 사립대의 경우, 이사진의 구성이 표면상으로는 姓도 모두 다르고 제대르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모두 실립자와 姻戚關係 있고 財政運用도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건실한 사학은 理事陣이 지역사회의 유지들르 학교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재정적으로도 기본체산을 확충하는 事業部를 두고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높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학에 대해 一律的인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건실한 綠色私學은 자율적으로 두

어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고, 위험 수위에 와 있는 黃色私學은 정부에서 지도하여 이끌어 나가야 하며, 도산 직전에 달한 적색 사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비감면, 실험실습비만 이라도 國庫支援 있어야

司 會 : 이제까지 주르 기부금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사학에 대한 國庫支援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학에 대하여 국가가 제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들 계신지요?

金熙執 : 高麗大學의 경우 현재 학생경비 중에 학비감면이라고 하여 납입금의 약 11%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입생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이 모두 등록금의 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이들 학생들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학생들에게 주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운 재정 형편도 감안하여, 학비감면 혹은 이공계동의 실험실습비만이라도 정부의 제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白勝基 : 美國 아이오와州에 가서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州 정부가 대학에 학생 수에 따른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립대학들이 비교적 승용을 트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國庫과 私立에 대한 어떤 偏見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립대학은 지방의 국립대학에서조차도 아주

수준급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25%이고 사립대학이 75%인데, 사립대도 역시 國家機能을 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던 균형 있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支出構造는 학교여건 따라 융통성 부여

司 會 :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학재정의 수입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支出의 문제들은 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학 재정 支出의 構造는 크게 인건비, 운영비, 자본적 지출 등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대학재정에서 人件費의 比重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白勝基 : 문교부의 지침에는 인건비 50%, 운영비 10%, 자본적 경비 20%, 학생경비 20%로 되어 있지만, 저희 慶園大學은 신설대학이라 비교적 인원수가 적고 호봉이 낮은 때문인지 작년의 인건비가 27%였습니다. 운영비는 11%였지만, 건물을 지어야 하는 까닭에 자본적 경비는 28%로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문교부의 가이드라인(guideline)도 좋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는 지양하고 학교의 실정이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融通性 있는 適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熙執 : 동감입니다. 高大의 경우, 순수한 인건비가 전체 豫算의 50.7%로 納入金의 63.21%를 차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대학이 교

수 수를 얼마나 두었는가, 1인당 인건비를 얼마만큼 책정해서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본다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인건비에 목이 조여 학교 시설 등 다른 것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엔 重績教授와 新進教授가 고루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교부 지침에는 인건비가 50%로 되어 있지만, 施設 投資에 역점을 둘 것이냐, 人力 投資에 역점을 둘 것이냐는 대학의 特性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需要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주어야 할 텐데 모든 곳에 똑같이 배급해 주는 형편이니 학교 운영에 彈力性이 전혀 없습니다.

尹正一: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外廓施設 投資에 힘쓰다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는 줄어든고, 또 수용시설은 있더라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 시설은 부실한 형편입니다. 저는 教育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수 1인당 학생비율은 1:35로 외국의 좋은 대학의 1:10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비율이 60% 정도는 되어야 교수 대 학생비도 나아질 수 있고 내용이 충실한 교수도 할 수 있으며, 운영비 비율도 20% 정도 되어야 내실을 다지는 豫算配定이 될 것일

니다.  
金熙執: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지난 4~5년 동안에 學生定員은 거의 2배로 늘어났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시설투자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高麗大 경영대학은 10년 전 당시, 10년 후를 내다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에 130~150명 단위의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실은 100% 활용해도 벅찬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인건비 수준은 떨어졌는데도 설비에 투자할 돈은 여전히 없는 형편입니다.

**대학에는 受益者負擔原則이 적용되어야 한다**

司 會: '80년대 이전에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정부의 保護的인 政策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수를 늘리지 않으면 납입금을 올려 주는 식으로 정부가 사학의 재정을 보조한 셈이 되었지요. 혹자는, '80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학생 수도 늘리고 납입금도 올려 주는 식의 二重支援을 하고 있는데, 왜 사학의 내적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金熙執: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高麗大는 창립 이래 '83년까지 지은 총건물량에 해당하는 시설을 '83~'85년의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지었습니다. 선사 등록금을 50% 인



“대외에 外廓施設投資에 힘쓰다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는 줄어든고 또 수용시설은 있더라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 시설은 부실한 형편입니다”  
(윤정일 교수)

상한다 해도, 등록금 자체의 비율로는 한지 모르나, 운용비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더 들기 때문에 빈 효과가 없습니다. 시설이 다 갖추어진 상대라면 등록금 인상이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올려 준 돈 불과 몇 십 억을 가지고 100년 걸려 지을 정도의 건물들을 2,3년내에 한꺼번에 짓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운용비를 충당하기에도 바쁜 뿐입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장학금만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기부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尹正一: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제정 규모, 재원 그리고 지출에 관련된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財政規模에 관련된 문제로는, 첫째 총량 재정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교

육예산이 GNP의 3.5%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고, 특히 教育稅를 도입하면서부터 순수 문교예산은 '80년의 18.9%에서 '85년의 17.7%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육단계별 投資配分이 不均衡하다는 것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배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 적절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급별로 부담 주체가 달리 설정되어야 하고, 대학의 경우에는 受給者負擔原則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셋째로는 학생 1인당 公教育費가 선진국의 1/3 ~ 1/4 정도로 아주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財源上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학생 부담이 과중하고, 재단 기여금이 적으며, 사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고, 기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支出構造上의 문제인데, 합리적인 配分의 基準이 없이 과거의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과 인건비와 시설비의 증액 지출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것 그리고 교수의 處遇改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교사의 질을 外面하고는 학교의 질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실질적인 질적 改善方案이 될 것입니다.

司 會 : 대학 재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대체로 다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논의된 대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이 좌담회를 마무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宋 梓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財政難 타개 위해 당국의 적극적 지원 필요

宋 梓 : 가장 시급한 것이 문교부의 일방통행 같은 官僚體制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監査를 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自律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裝置라는 입장에서 봐 주어야지, 잘못을 들추어 내고 지시사항대로 되있는가만 감시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문교부 지원도 미리미리 주어야 각 대학이 신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에 반영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재무위원회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의 입학시험을 보고 있는데도 그때까지 등록금 금액이 발표되지 않는 데서야 어떻게 학교 예산을 짤 수 있겠습니까? 대학마다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대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運營의 妙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맡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尹正一 : 대학재정의 개선은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즘 신문이나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寄附金 문제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과 외국에서도 기부금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감안하여 活性化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 발전에 공헌하고 싶은 자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와 높은 경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작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喪葬假교수님과 합쳐 그에 대해 연구한 적도 있지만, 전공계열별 差等納入金制度를 제안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납입금이 약간 인상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가계에 압박이 가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과열입시경쟁을 막아보는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人力活用稅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길러 낸 인재에 대하여 기업이 인력활용세를 통해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산학협동체제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高等教育發展特別基金의 조성에도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私學에 대한 認識의 전환이 아쉽다

白勝基 : 우리나라의 자산이라고는 人力밖에 없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길러 내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잘 해왔다고 봅니다. 교수의 처우가 더욱 개선되어야겠고 국가는 사학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

며, 기부금제도의 길도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당국은 사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 주면서 건실한 사학은 自律的으로 特性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 주고, 부실사학은 자연도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尹正一: 지방자치제에 따라 教育自治制가 실시될 때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고등교육기관만은 大學의 自律權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제만 하던 계속 미성숙 상태로 남아 있게 되므로, 선사 잘못되더라도 대학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대학재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학에 대한 認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設立者의 측면에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설립자가 내 학교,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수 채용이나 이사진 구성, 재정 운영 문제 등을 공공성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政府는 사학이 설립자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가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학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사학과 정부는 항상 격리·대립되어 있을 것이며 사학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젠 大學도 自律的 역량 가지고 있어

金熙執: 대학제정을 일문적으로 완전 자율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연구를 하면서 단계적·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란 곳이 그렇게 良識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사소한 것부터 확실적인 요소를 없애 가야 할 것입니다.

尹正一: 대학운영에 있어서 자율화가 잘 되어 갈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한 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내신성과 논술고사 반영률을 확실적으로 정해 주지 않았어도 전국 대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연세·서강·이화여대의 대학원간 학점 인정 체제가 自生的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혹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中間 調整機構를 둘 수도 있겠지만, 이젠 대학도 자율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大學財政의 自律化, 나아가 대학의 자율화를 촉구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배준근 교수)

白勝基: 너무 낙관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대학이라면 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좀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司會: 오랜 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재정은 自律化 되어야 한다는 것에 意見이 一致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大學財政의 自律化, 나아가 대학의 自律化를 촉구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